

電力수급 장기계획이 필수

=「산업의 中樞」 제한 送電 있어선 안돼=

이 원고는 91년 7월 25일자 동아일보 14면
에 게재된 필자의 칼럼을 일부 수정하여 옮겨
실은 것입니다. (편집자註)



馬 景 錫

〈韓國엔지니어클럽 名譽會長〉

오늘의 전력부족은 85년 3월 동력자원부가 91년까지의 전원개발계획에서 2백74만kW의 전원개발을 축소조정한 것에 기인한다.

81년 정부는 제5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96년까지의 장기전원개발계획(81년안)을 수립하고 경제개발계획에 발맞추어 발전소도 함께 건설하여 오다가 82년부터 발전소 발주를 3년이나 늦추었던 동자부는 85년 3월에 96년까지 원자력 4기와 석탄화력 4기 총6백50만kW의 발전소건설을 취소하는 구체적 장기전원개발계획(85년안)을 발표하였다.

81년안과 85년안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비교해보면 <표>와 같다.

<표> 총발전시설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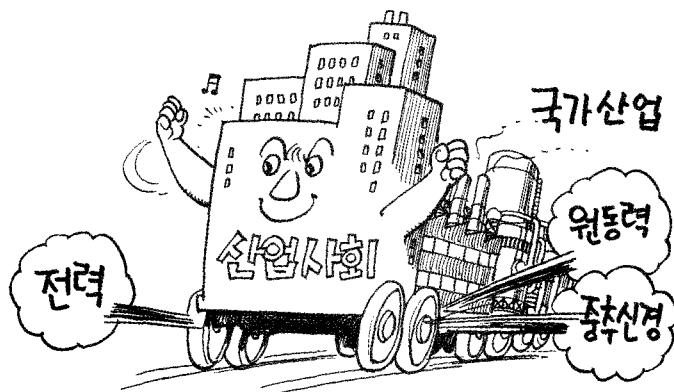
(단위 : 萬kW)

경제개발	4차	5차	6차	7차
연 도	77-81	82-86	87-91	92-96
81년 안	983	1,761	2,373	3,476
85년 안	-	1,806	2,099	2,826
조 정		+45	-274	-650

81년안에 의하면 96년까지의 전력설비증가율이 연 7.74%에 불과하고 과거 수십년간의 전

력시설 배가에 소요된 기간이 불과 5년인데 비해 10년에 배가되도록 계획을 대단히 낮게 잡고 있었다. 또한 최대전력과 평균전력의 증가율이 과거 10년간 연11.8%와 12.4%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 실적에 비하여도 대단히 낮은 예상치였다. 필자는 최대전력 증가율을 연12% 이상이라고 늘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확고한 자료와 산출근거를 갖고 있다. <표>에서 보면 유독 86년에 만은 45만kW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은 꺼야겠다는 근시안적 착상에서 비롯하였다고 본다.

예전했던 대로 83년과 84년의 최대전력신장률이 각각 14.1%와 15.9%를 기록하였고 어두웠던 경기전망도 호전되어 3년간 연이어 연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전원개발계획도 그 상향조정을 서둘러야만 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상기한 모든 경제여건을 무시하고 85년 3월에 장기전원개발계획을 91년까지는 무려 2백74만kW, 96년까지는 무려 6백50만kW나 하향조정하여 전력산업계를 놀라게 하였고 이구동성으로 분노케 하였으나 동력자원부에는 마이동풍이었다.



81년안에 의하면 91년까지 10년간 원자력 10기를 1년에 1기씩 준공하게끔 되어 있었고 80년 11월에는 원전 9, 10호기의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전 11, 12호기를 90년, 91년에 각각 준공하게끔 되어 있어 82년에는 그 발주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3년간 끌어 오다가 85년 3월에 다시 2년을 늦춰 90년, 91년 대신에 95년, 96년에 준공한다는 것이다.

원전 11, 12호기와 보령화력 3, 4호기가 81년안대로 91년도 이전에 준공되었다면 3백만 kW의 시설용량이 늘어나므로 오늘과 같은 전력부족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85년 3월의 전원개발계획 축소조정조치는 오늘의 전력부족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필자는 지적코자 한다.

5년간 발전소 수주를 못받은 모든 전력 산업체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 언급을 생략코자 한다. 다만 그中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韓重이어서 4,500억의 자본잠식을 당하고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마는 불운을 감내해야 했다.

고도의 기술과 10년工期에 20억弗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原電이 매년 1기씩 준공되므로 韓電, 韩重, 韩技, 原子力研究所, 韩電補修 등 원자력 산업체들은 원자력 기술인력양성과 기술축적 국산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다가 이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치명적 타격을 피할 길이 없이 매일같이 모여서 인력감축 등을 상의하면서 우울한 분위기에 잠기게 되었다.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전력은 국가산업의 원

동력일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다. 인건비의 상승에 따라 자동차는 불가피하고 정보사회에 진입하려는 우리로서는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력은 저장도 수출입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잉투자는 발전원가의 큰 상승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수요전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력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 전력생산량 및 소비량의 計測은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과거 수십년간의 소비 생산 실적이 모두 다 잘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사업의 특성을 잘 모르는 정부관리들이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 예비시설이 과다하여 발전설비건설을 5년간이나 중단하다가 지금같이 制限送電에 직면하면 그것을 모면하려고 경제성이 없는 休止발전소까지도 재 가동하고, 건설공기가 짧은 가스터빈, 複合火力 등의 건설을 서두르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모든 선진국에서의 전원개발계획은 발전산업인들의 고유업무이고 절대불가침의 의무다. 따라서 수요전망을 적절하게 하고 예비율을 늘 알맞게 유지하고 있어 양질의 전기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

전원개발계획은 전문기술인력을 갖추고 막대한 조직과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영기업인 韓國電力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또다시 주장한다.